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제218호 |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기획 ▶ 5면

한국 지상파 UHD 방송 전송방식 논의

기고 ▶ 6면

한국 라디오의 해묵은 과제는 과제, 하이브리드로 돌파하자

오피니언 ▶ 7면

[칼럼] KOC 2015 참석 후기

방통위, 심의 벌점 2배로 높여...방송 '재갈 물리기' 논란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 추진...오보·막말·편파 방송 감점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에 부과하는 벌점을 지금보다 최대 2배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방송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의 내부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10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 안전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내용·편성으로 구성되는 3개의 방송 평가 영역 중 운영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용 및 편성의 비중을 확대했다. 방통위는 "각 매체별 총점은 유지한 상태에서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의 배점을 줄이고 대신 내용과 편성의 배점을 높여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는 한편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강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용 영역의 '방송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의 감점 수준을 강화했

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 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감점은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했고, 공정성·객관성·재난·선거 방송의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로 늘렸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시정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해당 방송사에는 각각 -1, -2, -4, -10~15의 감점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제3기 정책 과제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 평가에서 감점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막말, 자극적인 방송, 편파 방송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에서 공익광고 편성 비율을 확대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를 신설했고, 주 시청 시간대 특정 방송 분야의 편중 예방을 위해 '주 시청 시간대 편성 평가'를 마련했다. 종합유

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채널 구성의 다양성 정보 등을 평가하는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를 신설하고, 'PP 만족도 평가'를 추가했다. '오보 방지 노력'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결정이 나면 6점, 법원의 정정 보도·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판결이 나면 8점을 감점하는 대신 방송사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받는 등 타당성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 3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노력', '방송기술 및 방송 콘텐츠 투자 평가' 등 평가 척도를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12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2016년 방송 실적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방송 사업자들의 프로그램 품격 향상, 오보 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 평가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기 짝이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여야 6대 3 구조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 공간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검열 기구로 전락한 기관이 방심위"라며 "자신들의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번번이 뒤집히고 있음에도 권력 비판 보도에는 옹호하는 등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이런 방심위에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의 중차대한 평가 요소를 맡기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 팔기'"라고 비판했다.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40%의 배점을 차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송 평가인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방심위가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본 개정안의 보고 안전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0월 25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언론 활동의 억압과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많은 사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년마다 받는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에 따라 방송사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개정안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낙하산 사장으로 KBS 장악에 나서나?

KBS 신임 사장 후보에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 차기 사장 후보로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이 선정됐다. 하지만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이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장 취임까지 상당한 난

관이 예상된다.

KBS 이사회는 10월 26일 여의도 KBS에서 사장 공모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벌여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을 신임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면접은 오후 늦게 마무리됐고, 오후 6시까지 표결절차를 논의한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1차 투표에서 고 후보자가 7표, 조대현 현 KBS 사장이 4표를 얻어 고 후보자가 조 사장을 제치고 차기 사장 후보로 선정됐다.

고 후보자는 한국의국여대 졸업 뒤 1985년 KBS 공채 11기 기자로 입사했으며 정치부 기자,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국장, KBS미디어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9월부터는 KBS비즈니스 사장을 맡고 있다.

KBS 이사회는 이번 주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

문회를 거쳐 제22대 KBS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방송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조 현 사장의 임기가 11월 23일까지인 점을 미뤄본다면 11월 중순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KBS 새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부적격 후보로 분류한 인사로 불공정 방송의 핵심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보도국장 재임 당시 KBS 기자협회의 신임 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받았고, 2012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KBS 양대 노조 신임 투표에서 84%의 불신임을 받아 해임된 바 있다.

현재 KBS 노조와 새노조를 비롯해 7대 협회(경영·기자·방송기술인·아나운서·촬영감독·카메라감독·PD협회)는 고

후보자의 사장 임명 강행 시 총파업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7대 협회는 10월 27일 성명을 통해 "여당 추천 이사들의 물표, 누군가의 뜻이 충실하게 관철됐으리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고대영은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KBS 신임 사장 후보로 고 후보자가 발표되자마자 "고대영 사장 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라며 "청와대의 KBS 장악 부역자로 낙점된 고 후보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어 "용산 참사 축소 보도", '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 발방' 등 정권 편파 보도를 주도해 90%가 넘는 불신임을 받고, 후배 기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 고 후보자"라며 "근혜맨"이고 후보자의 임무는 KBS를 집권 세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여론장악 임무 부여한 청와대, '정부 사장'의 선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 여당 추천으로 낙점된 이사 및 이사장의 면면을 보면 이번 사장 선출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은 확신으로 변한다"며 "정부의 이처럼 추악한 공영방송 장악 행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사회의 투쟁 의지를 모아 고대영 끌어내리기를 포함한 고대영 반 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10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고 후보자를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선정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친정권 보도로 KBS 내부에서 기자들의 거부감이 가장 높은 인물이 공영방송인 KBS를 이끈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당 추천 이사들이 국민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민들로부터 KBS를 빼앗아 정권에 바치려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청을 한다면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INVITATION

2015 Korean Broadcasting Technology Awards & The 28th KOBETA

초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합회는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기념식과 더불어 방송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들에게 수상하는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방송 기술대상 시상식'에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이 후 삼

DATE/VENUE

2015년 11월 10일(화) 오후 7시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자가용 : 타임스퀘어 주차장 L 또는 1라인 엘리베이터 이용

지하철 : 1호선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연결 (도보 3분)

5호선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 (도보 10분)



‘엠티락뒤치락’ 지상파 재송신 분쟁

법원, 지상파 ‘CMB 상품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갈등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이 엠티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는 CMB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매번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희

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0월 16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 분쟁 해결을 사업자 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 여부에만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CMB를 상대로 낸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 주도의 분쟁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 △이 분쟁이 인터넷TV(IPTV) 등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및 사회 일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방송의 공익성에 비춰보면 재송신 중단보다는 당사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방송 전파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한정된 자원이고, 정보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지상파방송은 공정하고 합리적 조건으로 제공돼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접근권이 차질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판결에는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동시 재송신이 영리 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바, 채무자(CMB)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5일 지상파 방송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CJ헬로비전은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티빙 이용자에게 KBS 디지털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과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권 등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어느 가치가 우선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CPS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재송신 계

약이 종료된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종전 280원에서 4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CPS 재협상을 시작했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CPS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재송신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와의 CPS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콘텐츠를 헐값으로 얻어 지상파 방송사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매출을 얻고 있으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재투자를 위한 정당한 노력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탄압’이나 ‘시청자 피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CPS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노력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강행한 재송신 협의체의 인적 구성도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을 강변하는 인사 위주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조차 참여하지 않은 편파적인 협의체 구성으로 현재 진행 중인 CPS 협상은 물론이고 소송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위성방송으로 난시청 해소해야”

위성방송 ‘공적 역할론’ 대두…“지상파와 병행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야”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병행해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지상파방송만으로는 난시청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상파 중심의 보편적 서

비스 논의를 위성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내용적 보편성 등 2가지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방송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내용적 보편성 측면이라면 접근 가능성은 주로 난시청 해소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산간·도서 지역 등 지상파 송신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지상파 송신 시설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나 산간 또는 구릉 등 자연적인 지형 차폐로 전파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난시청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KT스카이라이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이 수신되지 않고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도서·산간 지역의 시청자 수는 약 15만 명이다.

박 연구팀장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위성방송

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어서의 난시청 지역의 해소였고,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위성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위적 난시청 지역이 아닌 자연적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서 위성방송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는 위성방송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지리산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유료방송을 보고자 해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선을 놓아주지 않아 방송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성방송을 통해 난시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위성방송을 보급해 산간·도서 지역 분들의 매체 선택권을 뺏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동시에 스카이라이프가 KT와의 합병으로 사유화된 부분

이 공공 플랫폼 역할 수행과 연결해 아쉽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 연구팀장과 윤 소장은 “난시청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또는 공적 자금 지원 방식이 위성방송까지 확대된다면 비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반면 오영수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정부 지원이나 공적 자금 등 기금을 신설해 유료방송인 위성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며 정부 지원 부분에 선을 그었다. 오 과장은 “유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가 어디까지 확대돼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매체의 기술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또 오영수 경기도 과수는 “난시청 문제는 일반적으로 KBS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KBS가 하는 게 맞는데 KBS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성방송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KBS가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수신료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공공 주파수 수급 체계 담은 ‘전파법 개정안’ 제출

‘KT 무궁화 위성 3호 사건’ 재발막는다…위성망 양도·임대 승인 제도 도입

공공(公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앞으로 공공용 주파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사업자들이 쓰는 방송 및 통신용 주파수 외에 재난 통신망이나 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등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주파수 수급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계획이 없다 보니 주파수를 먼저 요구하는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수급 체계가 따로 없다 보니 어떤 사업에 주파수를 먼저 공급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 마련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주파수 수요를 매년 초 조사해 각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공급 계획을 세우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주파수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개정안은 또 위성망을 사용하지 않아 국제 등록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 및 임대를 허용하되 양도·임대·이용 중단을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각 국가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위성망을 ITU에 국제 등록해야 하는데 위성망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 등록이 삭제된다. 이는 일명 ‘KT 무궁화 위성 3호 사건’이라 불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KT가 정부 모르게 홍콩 ABS사에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할 당시 위성망의 양도 및 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한 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편 미래부는 연내 전파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케이블 ‘불법 영업’ 여전히 기승

방통위, 티브로드·씨앤엠에 과징금 10억 650만 원 부과



© KBS 방송통신 캡처

#사례1 서울 동대문에 사는 김모씨는 수년째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디지털 방송 전환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결국 김 씨가 없는 사이 전화를 받은 초등학생 딸에게 디지털 방송 상품을 안내한 후 설치 동의를 받았다. 1개월 무료 이용 후 계속 이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나 이용 여부를 묻는 전화는 없었고 요금은 그대로 청구됐다.

#사례2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모씨는 몇 달 전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으니 디지털 방송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TV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디지털 방송 상품으로 교체했지만 점점함은 펼쳐버릴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디지털로 바꾸지 않아도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약 담당자가 퇴사해 지금 당장은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케이블 방송사의 답변뿐이었다.

케이블 방송사의 불법 영업 및 판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와 씨앤엠에 불법 영업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기회로 케이블 방송사의 불법 영업이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10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씨앤엠 계열 SO에 총 10억 6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티브로드 5억 7,250만 원, ㈜티브로드노원방송 1,100만 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 680만 원 등 티브로드 계열이 5억9,030만 원을, ㈜씨앤엠 4억 300만 원, ㈜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1,320만 원 등 씨앤엠 계열이 4억 1,62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동시에 이들에게 금지 행위의 중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시정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이행 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티브로드와 씨앤엠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 반환금(약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 상품 또는 방송 부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 조치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또한 △가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 상품 가입자임에도 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 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업무 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 특히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민정 mjjang@kobeta.com

방송기술용어

주파수 다이버시티 Frequency Diversity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전파의 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통신 정보를 여러 개의 주파수에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각 주파수마다 수신 특성이 다른 성질을 이용해 1개의 신호를 서로 다른 몇 개의 주파수로 보내면 각 주파수의 전파 페이딩은 각각 일정하지

않으므로 가청 주파 출력단에서 서로 다른 신호를 합성하거나 양호한 수신 신호를 선택해 페이딩의 깊이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파수 인터리핑과 순방향 오류 정정(FEC)을 적용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변조 방식,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 중 주파수 호핑 등이 있다.

전숙희 sh45@kobeta.com

KBS 사장 선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야당 KBS 이사 추천 거부해야 하나?

“다수파 견제 장치 없어”… “야당 추천 뭉 거부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KBS 이사회가 여당 추천 이사만 참석한 이사회에서 사장 면직 후보자 5인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수파가 다수파를 견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다면 이사회 내 야당 추천 ‘뭉’을 거부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월 22일 오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사장 선임,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현 정권에서 정치권력 다수파의 ‘승자 독식’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초 권위주의 정권 막바지에 비해서도 더 퇴행적”이라며 “이사회 소수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다수파를 견제할 장치

도 없다면 정치적 선임 구조 즉 야당 추천 뭉을 거부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BS 사장은 11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어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사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 역시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1명은 여당이 추천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통위의 여야 3:2라는 불합리한 구조는 7:4로 이어져 정부 여당이 이사회를 장악하도록 관행적으로 굳어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수장 선임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권에서 독립적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 원칙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특별다수제, 사장추천위원회 등 (야당 추천 이사들의) 제도 개선 제안을 일축했는데 이는 단순히 소수파의 존재의의를 무시했다는 점뿐 아니라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적격 인사를 사장에 앉히려는 것만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하기는커녕 차선도 차악도 아닌, 최악 가운데 최악이 선임되는 것을 막는 것에 소수파 이사의 존재의

의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조항제 부산대 교수 역시 “올해 7월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시 ‘야당이 (해당 뭉을) 추천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정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조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야당이 내분돼서 견제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없었다”며 “야당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여당을 견제할 수 없는 사실상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유사 민주주의, 민주주의지만 권위주의에 더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공영방송과 부적격 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필요해”

한편 이날 토론회에 시청자 대표로 참석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나 부적격 인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공영방송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종합편성채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MBC를 필두로 시작된 방송사 총파업 이후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점점 더 커진 상황이다. 심지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는 ‘김비서’라 불리며 사회적 조롱거리로 취급되기도 했다. 이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내부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면서 신뢰 회복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철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책실장은 “KBS 내부에서도 제작진들의 자기 검열 등이 끊임 없이 벌어지면서 관제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나 직능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같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며 “사장의 출근길 저지, 파업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정배 EBS 노조위원장도 “임금피크제를 예를 들면 공익광고의 문구가 민주노총의 주장이나 논리보다 더 와 닿는다. 이처럼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왜 고대영이나 조대현이 와서는 안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이들이 왜 부적격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론 홍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도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파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기존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부끄러운 방송 대상”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권력을 오히려 희화화의 대상으로 만들고 동시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항의 방법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BS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부터 확보돼야

“반쪽짜리 사장은 국민 저항 직면할 것”

KBS 야당 추천 이사 4인의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이사 7인은 이사회 회의를 강행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임 과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개 언론 시민단체는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KBS 본관 앞에서 ‘KBS 국정화 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대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돼야 하는지, 공정방송과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공개적인 선임 절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특별다수제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여당 추천 이사 7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어 후보자 중 현직 KBS 및 KBS 자회사 사장인 후보자들에 대한 직무정지와 선임 일정 조정을 제안했다. 선임 과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

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사장 선임 과정은 공개가 원칙으로 스타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 제한된 내용이 포함됐을 때 스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스감사·인사관리 관련 내용으로 공개할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만을 예외로 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 회의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비공개대 절차의 투명성을 위배한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8월 8일 있었던 ‘8.8사태’를 언급하며 “그

때도 야당 이사들을 한명씩 제거하고 여당 이사만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민주적 절차로 뽑힌 정연주 사장을 내몰았다”며 “그 후 내쫓겼던 정연주 사장은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하고 여당 이사들의 잘못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런 행동을 또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7명의 이사만으로 KBS 사장을 뽑는다면 과연 누가 그런 사람을 KBS 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반쪽짜리 사장은 국민들의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만든 이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KBS 파업 찬반투표가 87.48%의 투표율에 88.9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돼 이 결과가 사장 선임에 어떤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숙희 sh45@kobeta.com

“특별다수제, 정치적 편향을 막는 안전장치될 것”

현재의 7:4 구조로는 공정한 의사 결정 힘들어



KBS가 KBS 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14명을 공개했다. 공개 전부터 부적격 인사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KBS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다수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서중 KBS 이사는 10월 15일 오후 3시 서울 NPO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가 바라는 KBS 사장의 자격’ 간담회에서 “KBS 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문제는 그런 자격을 어떻게 거를 것인지 장치의 문제”라며 “구체적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7:4의 구조에서는 투표의 의미가 없다”고 말해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면 정치 논리와 수적 우위에 의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특별다수제는 제일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을 채택하는 단순다수제와 달리 정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이사회 의결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여당 추천 이사들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편향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특별다수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특별다수제의 도입이 쉽지않아 보인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앞서 특별다수제 도입과 더불어 KBS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면접용 공통질문 채택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

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적 우세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은 “지금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도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특별다수제라는 형식으로 찾았는데 매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도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지속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요구제를 계속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혹자는 비판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시각에서 특별다수제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얻지 못한다면 얻을 수 있는 최소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특별다수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기자수첩

대한민국에 어른거리는 파시즘의 그림자

“정부 권위주의적 성향 점점 강해져”… KBS 이사회, 부적격 인사 밀어붙이나?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시차를 두고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특히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승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로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등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승절의 더 큰 목적은 파시즘의 부활을 경계한다는 데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모두 파시즘 국가였다. 파시즘(fascism)이란 원래 ‘묶음’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위주의, 국수주의, 극단적 반공주의적인 정치 이념이다. 파시스트들은 국가나 민족이 개인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인간 평등을 부정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막연한 선민의식과 근거 없는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파시스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정부 여당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서도 파시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제를

시행한 사례를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 심지어 독일과 일본에서도 군국주의 정부 즉 파시즘 시절에만 국정제가 시행됐을 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검정제로 바뀌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정제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민감하지 않은 현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국정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KBS 사장 선임 과정도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모든 행적이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을 하는가 하면

정부 여당 측 KBS 이사들은 설명 내외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극우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부적격 인사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현 상황이 파시즘 국면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극우적 방향으로 KBS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들을 굳이 이사나 사장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파시즘의 결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이 스스로 파시즘적 발상과 행태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기억하는 그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UHD TV ‘해외 직구’ 늘었다

“UHD TV 가격 낮아져”...“내년 초까지 고사양 TV 판매 급증할 것”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대의 UHD TV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10월 21일 몰테일이 운영하는 해외 직구 마켓 테일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직구 TV 구매에서 UHD TV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ull HD TV는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

이 때문에 올해 TV 출하 목표치를 하향 조정 한 TV 제조업체들도 UHD TV 출하 목표는 크게 줄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조사기관인 IHS 디스플레이서치는 “글로벌 15개 TV 제조업체의 올해 LCD TV 예상 출하량은 4월 목표치 1억 9,990만 대에서 7.3% 하락한 1억 8,530만 대였지만 UHD TV의 출하량은 변동이 없다”며 “오히려 중국 업체들은 UHD TV 출하량 비중을 한국이나 일본 업체들에 비해 높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TV 제조업체인 샤오미는 최근 가격적인 가격의 UHD TV인 ‘Mi TV 3’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0인치 4K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Mi TV 3’는 4,999위안(한화 약 88만원)으로 같은 크기의 UHD TV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Mi TV 3’는 두께도 11.6mm에 불과하고 성능과 디자인에서도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4개의 서브우퍼를 내장하고 있어 깨끗하고 깊이 있는 음질로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대형 TV의 구매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기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던 55~60인치 TV는 전년 동기 대비 6% 줄어든 반면 70~84인치 이상의 TV는 3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라 제조업체들도 UHD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UHD TV 가격대가 낮아져 이에 따른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동환 테일리스트 팀장은 “전통적으로 해외 TV 시장에서는 10월을 중심으로 상반기보다 약 50~400달러가량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다가오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로 내년 1월까지의 UHD TV를 포함한 고사양의 TV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BBS 불교방송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

10월 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취임식 열려



BBS 불교방송 제9대 선상신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열렸다.

선 사장은 지난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2006년에는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한국언론재단 경영본부장 등을 거쳐 불교방송 공채 출신 1호 사장으로 탄생하게 됐다. 선 사장의 임기는 2015년 9월 27일부터 4년간이다.

선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방송의 불법 홍보와 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취임 전 밝힌 바대로 6대 목표와 28대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RAPA, 국내외 방송장비 실태조사 나서

“국내 방송 장비 업체 경쟁력 확보 위한 것”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오는 12월까지 국내외 방송 장비 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RAPA는 국내 방송 장비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시장 및 경쟁 업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 장비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조사 대상 모집단 및 표본 설계 연구, 분석 △국내외 방송 장비 산업 실태 표본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RAPA 관계자는 “국내 방송 장비 산업은 영세성 및 경쟁력 부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경쟁사와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방송 장비 산업 수출 전략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언론노조 “고영주 먼저 해임하라”

“고 이사장 해임 법률 검토 이미 끝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10월 19일 성명을 통해 “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은 공영방송마저 이념 전쟁터로 삼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농락하는 데 앞장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조우석 KBS 이사를 해임하는 일”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미루기 위한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부적격 인사들을 방송계에서 당장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방문진 야당 인사들이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고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방통위 내부에서 고 이사장 임명 철회 권한을 놓고 해석 논쟁이 일어나면서 고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 없이 직권 상정하면서 고 이사장 해임에 대한 법률 검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방송 사업자인 MBC의 공직 책임 실현을 위한 대표자로서 사실상 MBC 사장과 동일한 수

준의 공직 책임 실현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에 방송법상 방송 사업자의 공정성·공익성 내지 공직 책임 의무 위반을 직접적인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고 이사장 해임) 미룰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김환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소송’에서 김 전 사장의 직무 능력 상실 및 세월호 오보 사실을 인정하면서 “KBS 설립 목적과 공

적 책임의 실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아 타당한 해임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고 이사장 해임도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방통위의 권위를 훼손한 부적격 인사들을 방송계에서 당장 퇴출하라”며 “고영주 등 공영방송 부적격 인사 해임”을 상징,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10월 23일에 열린 전체회의에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며 방송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은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결과를 현행 보다 최대 2배 반영

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의 내부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방심위가 어떤 곳인가? 여야 6대 3 구조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 공안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검열 기구로 전락한 기관”이라며 “자신들의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번번이 뒤집히고 있음에도 MBC의 박주신씨 병역 관련 보도 심의에서도 나타났듯 권력 비판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 여당 편들기 보도에는 옹호하는 등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이런 방심위에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의 중차대한 평가 요소를 맡기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기’”라고 비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201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가 10월 24일 장지원가든 유원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체육대회에 참석한 약 150여 명의 방송기술인들은 청팀과 백팀으로 각각 나뉘어 팀별 응원전, 주사위 OX 퀴즈, ‘볼사조, 여왕을 지켜라-미션 파쿠’, 우주인 축구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이진별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교육원

[전북권 지역 방송기술 세미나] 교육 안내

• 교육목적

지역 방송기술인의 기술 및 정책적 직무능력 향상 도모, 차세대 방송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 우수 방송기술 인력 양성

• 교육기간 2015.11.03.(화), 13시 ~ 18시 (교육비 무료)

• 교육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20명(타 직군 수강 가능)

• 교육장소 JTV전주방송 4층 대회의실(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재)

• 접수방법 10월 23일(금)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사전 접수 및 11월 3일(화) 교육 당일 현장 접수
※ 사전 접수자에 한하여 교육 당일 현장에서 강의교재를 드립니다.

• 담당자 강민정 과장, 민서진 연구원

• 문의처 사무실 02-3219-5640~1 / 교육장 031-219-8261~2

• 이메일 bea@kobeta.com

일정	시간	강사	교육 내용
11.03. (화)	13:00~13:30	방송기술교육원	•인사말씀, 교육안내
	13:30~14:50	MBC 신매체개발부 권철 부장	•지상파방송의 위기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 •위기를 기회로
	14:50~15:00		휴식
	15:00~16:20	LG CNS 빅데이터사업부 천석진 부장	•빅데이터의 개요 •빅데이터의 기본 체계 •빅데이터 활용 사례 •빅데이터 Q&A
	16:20~16:30		휴식
	16:30~17:50	KBS 기술연구소 서영우 박사	•미디어 환경 변화 •지상파 UHD-TV 현황 •지상파 플랫폼 전략
	17:50~18:00	방송기술교육원	•설문조사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한국 지상파 UHD 방송 전송방식 논의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 UHD 방송용 할당은 우리나라 국회, 정부, 방송사에 있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기록이다. 비록 30MHz 할당에 그쳐 지역 UHD 방송 추진, 난시청 해소, 혼신 회피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정부, 방송사, 가전사 등이 슬기롭게 이슈를 해결해 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전송방식은 주파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융합형 서비스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고를 통해 현재 국내 UHD가 당면한 기회와 제약 등을 살펴보고, 이 상황이 향후 4K 한류와 지상파방송 재도약의 지렛대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



임종곤
KBS 기술연구소 팀장

698	710	718	728	748	753	771	773	783	803	806
DTV	UHD 2ch	보호 대역	통합 공공망 (UP)	이동통신 (UP)	보호 대역	UHD 3ch	보호 대역	통합 공공망 (UP)	이동통신 (Down)	보호 대역
	12MHz		10MHz	200MHz		18MHz		10MHz	200MHz	
	8MHz		5MHz			2MHz		3MHz		
Ch52, 53			Ch61, 62, 63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700MHz)				

700MHz 주파수 분배 고시

국무조정실은 2014년 10월 20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발족,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14일 금요일 본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재난 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MHz 대역에서 20MHz 폭(718~728MHz, 773~783MHz)을 통합공공망 할당을 의결했다. 또한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한 잔여 대역(88MHz 폭)에 대해 미래부와 방송통신 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위 결과에 따라 2015년 7월 27일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지상파 UHD용으로 30MHz 폭을, 이동통신에 40MHz 폭(상하향 20MHz)을 분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제2015-57호로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일부개정'을 2015년 8월 21일에 고시했다. 다만, "698~710MHz 및 753~771MHz의 주파수 대역은 UHDTV 방송용으로 사용하되 UHDTV 전환 기간에 한해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700MHz 대역의 지상파 UHD 분배에 대해서 지난 2010년부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보통신부 시절의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매몰돼 지상파 할당 절대 불가 입장이었다.

UHD 방송과 변화

DTV 방송 Full HD와 Ultra HD의 차이점을 과장해서 표현하면, 미국 네바다주의 '그랜드캐니언'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직접 현장

에 가서 경탄하는 느낌이라 하겠다. 일단 4K의 거대한 화면으로 시야가 감싸진다. 초당 60장의 연속된 화면으로 카메라의 패닝과 틸트에 의한 불연속성이 제거된다. 피사체 사물의 원본 컬러를 재현해 실감이 난다.

또한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적용해 기존 TV에선 억압됐던 하이라이트가 그대로 재현돼 실감 영상이 가능하다. 광색역(WCG:Wide Color Gamut) 사용으로 원본 컬러에 가까운 색을 TV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Full HD인 DTV는 UHD 등장과 함께 퇴물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아날로그 TV가 겪은 격변으로 인해 당시 구현 불가능한 기술은 자연히 다음 세대에 위탁됐다고 봐야 한다. 아날로그 TV 방식인 NTSC 컬러를 100%로 기준을 삼으면 DTV가 ITU-R Rec. BT.709 규격으로 87.2%, Adobe RGB가 101.7%, 디지털시네마 DCI가 109.5%이다. 4K UHDTV 이상에서 사용하는 컬러는 ITU-R Rec. BT.2020으로 150.2%에 달한다.

1초당 TV 화면에 표시하는 영상 프레임의 수는 아날로그와 동일한 60i(초당 30장을 60장 비월주사방식)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도 Full HD 영상은 최고 수준이다.

전송기술도 크게 달라진다. DTV Full HD보다 4배의 고해상도에 2배의 프레임율로 합쳐서 8배로, 원본 데이터가 폭증한다. 여기에 10채널 이상 초다채널 오디오 분량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기존 6MHz 대역폭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영상 및 오디오 압축기술과 손실이 거의 없고,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전송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DTV 이후 10년 이상 방송 기술, 가전 기술, 시스템 기술, 컴퓨터 반도체 기술이 발전을 거듭했다. 현재의 기술을 조합하고 개발하면 6MHz 대역폭의 물리적 제약 극복이 가능하다. HEVC의 고효율 압축기술, SFN(단일주파수방송망), NUC(비균등 성상), 245QAM 이상 고차원 변조기술, 다차원 오류정정부호기술 등을 적용하면 TV 안테나로 소위 HDR WCG 10.2 채널 서라운드 4K UHD를 지상파에서 감상이 가능하다.

UHD 전송방식

현재 우리나라의 UHD 관련 송수신 표준은 2014년 10월에 TTA에서 표준화된 'TTTAI.KO-07.0123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잠정표준)'이 유일하다. 이 표준은 방송 방식이 DVB-T2로 기술이 완성된 시기는 약 6년 전이다. KBS는 지난 2012년부터 이 방식으로 실험방송을 진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ATSC에 2012년 4월부터 관리위원회(MC)와 기술위원회(TC)가 설치돼 본격적인 차세대방송규격 작업이 시작됐고 현재는 이 표준을 ATSC 3.0이라고 한다. ATSC 3.0 표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20여 년간 방송에 사용된 MPEG-2 TS 구조를 탈피해 완전한 IP로 프로토콜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

TS와 달리 IP 구조는 방송 콘텐츠의 모바일, PC, 네트워크 등으로 유통에 유리하다. 그리고 DVB-T2로부터 ATSC 3.0이 진화했기 때문에 다중화 구조, 심볼 매핑구조, 오류정정부호, SFN 등에도 고도의 기술이 적용돼 그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본 표준 최종 의결이 2016년 1/4분기 경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UHD 본방송까지는 다소 촉박하다. 송신, 송출, 수신, 링크, 제작, 시그널링, 시스템 관리 등의 장비 수급도 상당한 이슈로 지적된다.

DVB-T2로 방송한다면 반년 이내에 UHD 본방송이 가능하지만 2~3년 내에 진부한 시스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ATSC 3.0을 기다린다면 2016년 말 또는 2017년에 본방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에 본방송 추진 초기까지 장비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정부와 방송사 그리고 가전사들이 국가의 미래 미디어를 위한 최적의 방식을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다. 충분한 기술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식을 선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기술교육원

[오디오 MIXING & MASTERING(2차)] 교육 안내

- **교육목적**
가장 앞선 이론과 실무적 지식
실제 방송현장 recording, 5.1 mixdown, 5.1mastering
녹음, 편집, mixing, 토론을 통한 workshop형태의 실무과정
현재 음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음향감독들을 위한 고급 실무과정
장비의 사용방법을 강의하기 보다는 보컬편집, 보컬 튜닝, 믹싱 밸런스, 마스터링 등 실무적 과정에 중점
- **교육기간** 2015.11.10(화) ~ 11.12(목), 총 3일
- **교육대상** 지상파 방송사 기술인 10명
- **교육장소** KBS 본사 신관 TV공개홀
- **강사소개** 현장 음향 시설의 사용, 강의 진행
KBS 음향감독 문용석(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뮤직뱅크 음향감독)
KBS 음향감독 김형창(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운드 마스터링)
KBS 음향감독 최재영(보조강사)
KBS 음향감독 장건호(보조강사)
- **접수방법** 10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비** 무료(중식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 및 교육생 출장비 각자 자체부담)
- **담당자** 강민정 과장, 민서진 연구원
- **문의처** 사무실 02-3219-5640~1 / 교육장 031-219-8261~2
- **이메일** bea@kobeta.com

※ 교육 커리큘럼 '유희열의 스케치북'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정	시간	강사	교육장소	교육 내용
1일차 11월10일(화)	11:00~18:00	문용석(음향감독)	KBS 신관 TV공개홀	• 스튜디오 사설견학 및 설명 / 시스템구성, 악기구성, 마이크 설치 / 사운드 체크 / 음향 리하설(무대셋업) / 카메라 리하설
	18:00~19:00	장건호(보조강사)		• 석식 및 녹화준비
	19:00~22:00			• 공연녹음(유희열의 스케치북)
2일차 11월11일(수)	10:00~12:00	문용석(음향감독)		• 준비 및 시설장비 설명 / 편집&믹싱실습
	12:00~13:00	최재영(보조강사)		중식
	13:00~18:00			• 편집&믹싱실습(2일차는 종료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3일차 11월12일(목)	10:00~12:00	문용석(음향감독)		• 편집&믹싱실습
	12:00~13:00			중식
	13:00~16:00	김형창(음향감독)		• DAW System for Mastering
	16:00~17:00			• Mastering for Broadcasting
	17:00~17:10			• Plug Ins
	17:00~17:10			• Vlan 및 트렁킹 및 이더채널
	17:00~17:10			중식
	13:00~15:00			• 리뷰
	15:00~17:00			• 설문조사

방송기술교육원

[네트워크 및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실무(2차)] 교육 안내

- **교육목적**
파일기반 방송시스템 핵심기술 습득을 통한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
미디어 네트워크 관련 실무기술능력 강화
서버와 스토리지 전반에 대한 이해
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각 방송사의 사례 강의를 통한 실무능력 강화
*관련 교육은 초종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기간** 2015.11.17(화) ~ 11.20(금), 총 4일
- **교육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15명
- **교육장소** KBS수원센터 인재개발원 내 방송기술교육원 102호 강의실
- **접수방법** 10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비** 무료(중식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 및 교육생 출장비 각자 자체부담)
- **담당자** 강민정 과장, 민서진 연구원
- **문의처** 사무실 02-3219-5640~1 / 교육장 031-219-8261~2
- **이메일** bea@kobeta.com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정	시간	강사	교육 내용
1일차 11월17일(화)	13:40~14:00	방송기술교육원	•교육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4:00~16:00	백수종 차장 KBS 기술관리국 기술기획부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개요
	16:00~18:00	조용노 이사 한국EMC 글로벌 서비스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2일차 11월18일(수)	10:00~12:00	이종복 부장 ㈜랜덤투 클라우드본부	•서버의 기초 - 서버의 기본 구조, 벤더의 비교
	12:00~13:00		중식
	13:00~15:00		•서버와 가상화 -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15:00~17:00		•Windows2008R2 - 서버 서비스의 설치 및 구성, 서버 모니터링
3일차 11월19일(목)	10:00~12:00	안춘근 본부장(이사) 코네티크놀로지 영업본부	•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MAM)의 이해
	12:00~13:00		중식
	13:00~17:00	하종진차장 KBS 네트워크관리국 시스템운영부	•미디어 네트워크 개요 및 구성요소 소개
4일차 11월20일(금)	10:00~12:00	이영우 차장 ㈜이테크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연동기술
	12:00~13:00		•파일기반 방송시스템과 보안
	13:00~15:00		•Vlan 및 트렁킹 및 이더채널
	15:00~17:00		중식
			•라우팅 소개
			•GNS를 이용한 실습

한국 라디오의 해묵은 과제, 하이브리드로 돌파하자

임재윤 MBC 미래방송연구소 차장(라디오PD, 넥스트라디오포럼 운영위원)

진퇴양난(進退兩難)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다. 디지털로 가자니 너무 늦은 것 같고, 스트리밍으로 무게추를 확 옮기자니 '방송'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다. 그렇다. 한국 라디오 플랫폼 얘기다.

논의 시작은 빨랐다. 일찍이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방송사들은 디지털라디오 기술표준 선택을 고민했다. 그러나 미국식 디지털TV 기술표준의 취약점(이동 수신)을 보완하는 해법으로 DAB 디지털라디오를 변형한 DMB가 등장하면서, 디지털라디오 논의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엔 각자 유리한 기술표준을 주장하는 메이저 방송사들의 갈등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 와중에 스마트폰바일 혁명에 올라탄 라디오 OTT가 시장에 뿌리를 내렸고, 기술표준에 대한 이견이 잦아진 뒤에 단말기 보급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정이 미뤄졌다. 그제 2012년 봄이다. 그 후로 3년, 방송안팎의 시선은 UHD TV에 쏠려 있고, 차세대 라디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실종됐다.

한편 우물 밖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은근과 끈기로 DAB 디지털라디오를 보급해온 영국과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디지털라디오 이용률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고, 마침내 FM을 끊고 디지털 송출로 완전 전환하자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혁명 직후(2009년), 유럽 동료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한 호주는 디지털라디오 보급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HD-Radio)은 정했으나 디지털라디오 보급을 시장 자율에 맡긴 미국의 경우, 스트리밍과 위성라디오의 강세 속에 디지털라디오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디지털라디오 보급이 비교적 잘 된 국가나 사실상 실패한 국가 모두 스마트모바일 등장 이후 고민에 빠졌다. '디지털라디오냐?', '스트리밍이냐?',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방송망을 계속 진화시킬 것인가? 인터넷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갈팡질팡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난 수년 간 양자택일의 프레임에 빠져있던 세계 라디오업계는 요즘 '제3의 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는 길, 하이브리드(hybrid)가 궁극적 해법이 되리라는 생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이브리드 라디오 = 인터넷의 비교우위 + 지상파의 비교우위



하이브리드라디오앱(미국 Sprint의 NextRadio app.)

고정 비용으로 막강한 동시전송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지상파의 비교우위라면, 양방향성과 소프트웨어적 기능 확장은 인터넷의 비교우위다. 각자를 따로 생각해 양자택일의 고민(아날로그 지상파에서 디지털 지상파로 갈 것인가? 스트리밍에 몰방할 것인가?)에 빠졌던 세계 라디오업계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지름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인터넷기기가 어느새 사람들 손마다 들려있으니, 여기에 지상파를 쏙으면 되지 않겠나?

하이브리드라디오는 실시간 오디오는 지상파로 받고, 나머지 방송 정보와 양방향성 구현 등은 인터넷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디오수신기에 인터넷을 쫓는 방법도 있지만 스마트기기, 특히 개인의 필수 휴대기기가 된 스마트폰에 지상파라디오수신칩을 넣음으로써 광범위하게 보급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라디오를 스마트폰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FM(혹은 디지털라디오) 같은 지상파라디오칩이 내장돼 있어야 하고, 이를 구동시킬 앱으로는 일반 FM앱이 아닌 하이브리드라디오앱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앱은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데, 일반 FM앱이 주파수 선택, 볼륨 조정이라는 기존 FM 라디오의 UI를 그대로 가져오는 개념인 반면, 하이브리드라디오앱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라디오 OTT와 같이 주파수를 몰라도 브랜드와 로고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으며, 풍부한 방송정보, 실시간 피드백, SNS 공유, 다시듣기 등 확장된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스마트폰에도 망장이 들어 있었다?

하이브리드라디오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폰에 FM이나 DAB칩 탑재를 추진하던 라디오업계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많은 스마트폰에 FM칩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중 많은 수가 불활성화(deactivated)돼 출고된다는 것. 불활성화 돼 있는 FM칩은, 들어있어도 쓰일 수 없는, 마치 사람의 망장과 같은 것이다.

물론 FM칩만 들어있다고 라디오가 들리진 않는다. 이어폰을 안테나로 활용하기 위해 안테나 단자와 칩모듈이 연결돼 있어야 하고, 라디오 구동을 위한 API와 앱도 필요하다. 그러나 칩에 비하면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조치일 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닌 다른 주체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면 왜 쓰지도 않는 FM칩이 스마트폰에 들어갔을까? 와이파이라 블루투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커넥티비티칩에 FM 기능이 통합돼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를 소위 콤보(combo)칩이라 하는데, FM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단가에 거의 영향이 없고, 글로벌한 부품 공급 체계에 따라 굳이 FM 기능이 빠진 커넥티비티칩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경우,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이미 FM칩이 내장돼 있으나 이 중 2/3가량이 불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PR, 보스턴 글로브,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 특히 시장의 메이저라 할 수 있는 애플, 삼성, LG의 제품이 불활성화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 아이폰6에 FM칩이 들어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국내에 유통 중인 삼성과 LG의 플래그십 모델들의 FM칩 내장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칩도 내장돼 있고 실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외산폰들(HTC, 소니, 모토로라, 화웨이, 샤오미 등)은 국내 대리점에서 구하기 어렵다.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FM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있어요?' 물어보면 주로 폴더형 '효도폰'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내의 특이한 점은 '홍길동 FM칩'의 존재였다. FM을 들을 수 있으나 홍보물은 물론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스펙에도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폰들이 있다. 최근 많이 팔리는 SKT의 루나폰, LG의 밴드플레이폰이 그런 것인데, 포장을 뜯어서 동작시켜보기 전에는 FM을 들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필자가 회사 주변 다섯 군데 대리점을 뒤졌지만, 이들 폰들로 FM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원이 없었다. 공식 웹사이트의 어디에도 FM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FM 수신칩, 그야말로 '홍길동칩'이다.

행동에 나선 미국과 유럽

이런 상황을 간파한 미국과 유럽의 라디오업계는 스마트폰 내 지상파라디오 수신칩 활성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타겟은 데이터소비 감소를 우려해 해당 칩 불활성화를 제조사에 요구해왔던 이통사, 글로벌 제조사, 그리고 무료 보편 재난매체를 보급할 책임이 있는 정부다. 유럽 라디오업계는 사회적 책임과 청취자 편익을 강조하면서, BBC와 EBU(유럽 방송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NAB(미국 방송협회), 호주 CRA(상업라디오협회)까지 연계해 'Universal Smartphone Radio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라디오업계 역시 연방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 의회 로비, 여론전 등을 펼치고 있다.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미국 라디오업계의 비즈니스적인 해법, NextRadio 사례다. NextRadio는 스마트폰 내장 FM 수신칩을 통해 하이브리드라디오를 구현하는 사업자로서, 하이브리드 라디오의 양대 핵심 요소인 하이브리드라디오앱(NextRadio app)과 방송 정보 클라우드 서비스(Tag Station)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한 라디오 그룹인 'Emmis Communication'이 자회사를 설립해 경영을 전담하고 있으나, 그 사업비용을 미국 라디오업계 공동 펀드와의 콜업션을 통해 보장받는 독특

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단일 기업에 의한 스피드와 추진력을 확보하면서도 업계 공동 이익에 배치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로 보인다.

이통사 설득에 공을 들여왔던 NextRadio는 2013년 드디어 미국 내 3위 이통사 스프린트(Sprint)를 잡았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스프린트가 판매하는 안드로이드폰의 FM 수신칩을 활성화하고 NextRadio app을 탑재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스프린트의 안드로이드폰 40여 종에서 FM 라디오를 하이브리드 앱으로 들을 수 있으며, 여기에 갤럭시 S6, 갤럭시노트5, LG G4 등 메이저 제조사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NextRadio의 끈질긴 설득과 여론 마케팅은 결국 올 7월 AT&T, 그리고 8월엔 T-Mobile로부터도 스마트폰 FM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미국 4대 메이저 이통사 4개 중 3개의 스마트폰에서 FM을 들을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한국 라디오의 여러 난제들을 관통하는 하이브리드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한 하이브리드라디오는 청취자, 방송사, 정부에게 다양한 편익을 주는 것은 물론 이통사와 제조사에게도 긍정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아래 표에서 붉은색으로 강조된 부분들은 그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국 라디오의 해묵은 과제들이다. 해결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방송사들이나 정부나 모두 감나무 밑에 자리만 펴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첫째, 스마트폰을 라디오 단말기로 활용함으로써 디지털라디오 도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국내 디지털라디오 도입 논의의 발목을 잡은 마지막 문제는 단말기 보급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였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라디오는 스마트폰을 지상파라디오단말기로 확보하는 구조다. 일단 현행 FM칩으로 시작하고, 디지털라디오 기술 표준과 정책이 확정되면 스마트폰 제조 단계에서 FM칩을 DAB+ 등의 디지털라디오칩으로 교체함으로써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바꾸는 시점에 디지털라디오로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다(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는 1년 2개월이다). 하이브리드앱을 통해 라디오를 접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속 칩이 FM인지 DAB+인지, 아날로그 송출망을 타고 오는지 디지털 송출망을 타고 오는지 알 길이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저 내가 듣던 채널 음질이 좀 좋아졌구나, 잡음이 없어졌구나, 못 보던 채널들이 늘 어났구나 느낄 뿐이다. 망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디지털 도입(전환)이 가능해진다.

둘째, 청취율 조사 고도화를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로 점프할 수 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TV에 내장된 파플미터를 통해 실제 시청 채널을 감지하는 시청률 조사와 달리 청취자에게 직접 '청취 기억'을 묻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양한 단말기와 장소를 통한 청취 정보를 수집한다는 면에서는 '통합 청취율'의 장점이 있지만,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진다. 더구나 설문 조사 형식이라 샘플이 작을 경우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 경쟁매체들의 광고 효과 측정 방법이 정밀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라디오의 이 같은 청취율 자료는 광고매체로서의 매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샘플을 키우고 스마트 청취율 조사 기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대안은 요원해 보인다. 하이브리드라디오는 이용자가 앱으로 라디오를 조작하므로 그 액션

관련 주제	하이브리드라디오가 각주체들에 주는 편익
청취자	스마트한 사용자 경험(브랜드 로고를 통한 채널 선택, 풍부한 방송 정보, 실시간 인터랙션, 여타 인터넷서비스와의 연결 및 확장성, 개인화 편집) 경제적 매체에 대한 선택권 (데이터요금 및 배터리 절약) 라디오 통합 플랫폼 구현에 따른 편의성
라디오 방송사	청취율 조사 고도화를 넘어 빅데이터 활용 단계로 도약 (정밀 편집 및 광고매체로서의 매력도 제고) 스마트미디어로의 진화에 따른 올드미디어 이미지 탈피 방송 정보 메타데이터 유통 체계 효율화(사업적 활용의 인프라)
이동 통신사	일반FM과 달리 관련 인터넷서비스 사용 활성화 재난 매체 기본 탑재에 따른 공익적 이미지 구축 경쟁사 대비 차별적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
스마트폰 제조사	재난 매체 기본 탑재에 따른 공익적 이미지 구축 경쟁사 대비 차별적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
정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가성비 높은 현실적 재난 대응 매체 보급 디지털라디오 도입의 최대 장애물(단말기 보급 문제) 제거 스마트라디오의 IT융합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활성화

로고가 빠짐없이 데이터로 남는다. 청취율, 점유율, 지속 시간, 채널 변경 경로, 피드백 빈도, 볼륨 조정, SNS 사용 등 청취자의 모든 행동이 빅데이터로 쌓인다. 기존 청취율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편집 자료, 광고 자료, 마케팅 자료가 나온다. 물론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따라야겠지만.

셋째, 재난매체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실용적 백업 재난매체를 모두의 손에 들려줄 수 있다.

'라디오가 재난매체로서 중요하다'는 말은 한국에서 이제껏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지하 주차장 등에서 라디오와 DMB 수신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거 무슨 소리냐며 항의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음영 지역이 개선되는 움직임은 파부에 닿지 않는다. 또 재난 시 바로 손에 닿는 곳에 단말기가 있어야 재난매체로서 의미가 있는데, FM 수신기를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를 시장에만 맡겨버리는 정부와 국회가 진정한 라디오를 재난매체로 보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라디오가 '선언적 의미의 재난 매체'를 넘어서려면 두 가지 문제를 짚어야 한다. 우선 재난 시 라디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난발생 시 라디오는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신속히,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갭필러가 곳곳에 깔려야 작동하는 이동통신망과 달리, 건물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도 라디오전파는 수신할 수 있고, FM수신에 필요한 단말기 전력이 적으므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통신망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몇 해 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이동전화망 신호로 추가 기폭 장치를 터뜨릴 위험 때문에 당국이 현장 주변의 통신망을 차단했었다).

한편 리턴 채널이 없는 라디오는 통신망처럼 고립된 사상자가 '나 여기 있소하는 피드백'을 줄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는 통신망이 비교우위에 있다. 이처럼 라디오와 IP 기반 통신망은 재난매체로서의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통신망을 재정비하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는 주로 IP 기반 재난통신망이다. 라디오의 차별적 비교우위를 인지하고 이를 백업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중요한 업무는 항상 백업을 구성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방송 시스템도 백업 구성이 기본 아닌가?). 다음은 단말기 접근 가능성이다. 라디오가 재난매체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순간 뻘으면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 FM 수신칩이 스마트폰에 내장된다면, 개인마다 재난 대비 단말기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3G, LTE가 끊어져도 동작한다. 고립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비행기모드로 돌리면, 적은 전력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현재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다.

마지막 편익은 라디오의 올드미디어 이미지 탈피다. 하이브리드라디오는 스마트미디어다.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가 아니라, 스마트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고 스마트모바일의 다른 서비스들과 자연스럽게 융합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시장의 '홍길동폰, 홍길동칩' 얘기를 했었다. 국내 제조사들은 왜 FM 기능을 멋있게 내세우지 못했을까? 몇몇 실무자들은 '라디오의 구린 이미지'를 언급했다. 라디오라는 올드미디어를 강조하는 순간 그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의 이미지마저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미국 NextRadio의 홍보 영상을 보시기 바란다(https://youtu.be/GjiL13aTzEo). 여전히 구린가? 스타일리쉬하고 힙한 미디어 아닌가? 라디오는 시각에 자유를 주는 매체다. 사유와 감성의 중요성이 재조명받는 시대, 스마트한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라디오는 세련된 대안미디어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에게도 매력적인 기능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젊은 청취자들도 재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라디오, 5G 시대에도 의미가 있을까?

장밋빛 청사진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을 보자. HD 영화를 수 초 내에 받아버리는 기가인터넷 광고가 자주 눈에 띈다. 모바일 전송 용량과 속도가 극대화되는 5G 시대도 곧 열린다고 한다. 앞서 설명한 하이브리드라디오가 필요한 이유들도, 그런 시대가 되면 다 부질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반론하기 못하겠다. 적어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그러나 그런 때가 오면 논의의 프레임을 옮겨야 할 것이다. 어떤 기술이 더 나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료 보편 서비스로서의 방송'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방송' 개념을 포기하지 않은 한, '라디오 발전'의 다음 스텝은 하이브리드라디오라는 말도 된다. 업계의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 개념이 해체되는 시점이 오기 전에 실현되길 바랄 뿐이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OC 2015 참석 후기

칼럼



오연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다. 그중에서는 김동준 InnoCatalyst 대표의 혁신에 대한 강연이 인상적이었다. 김동준 대표의 강연 내용이 동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이름(혁신+촉매)이 말해주듯이 잘나가던(본인의 주장임)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혁신의 전도사가 된 과정과 혁신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KOC 2015에서는 2014년에 비해 현재나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제는 ‘창조적 소수자(The First Mover)’이고,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Moonshot Thinking(미래를 움직여라), Purple Thinking(가치를 융합하라) 및 Destructive Thinking(틀을 파괴하라)로 구성됐다.

Moonshot Thinking의 첫 번째 강연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Moonshot) 계획을 우주항공연구원 류동영 달탐사체계 팀장이 설명해 주었다. IT나 미디어 업계에서는 흔히 잘 접할 수 없지만 ‘마션’ 개봉기에 적합한 강연이었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인공지능에서 Machine Learning이나 Deep Learning의 의미를 컴퓨터가 ‘개(dog)’를 개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예제 등을 들어서 설명했다. 컴퓨터 인지자동화가 발전한 미래 사회에서 사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율림 있는 강연이었다. 강원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장은 기어VR 등의 기기로 몰입감을 증대시켜주는 가상과 현실의 접목을 설명했다. 머지않아 스포츠 중계에서 가상현실 기기를 통하면 모두에게 VIP석에 앉은 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Purple Thinking 세션에서는 주로 융합기술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Purple’이 Blue Ocean과 Red Ocean을 섞은 융합의 의미인 것 같았으나, ‘보랏빛 추억’이나 씨스타 ‘보라’가 더욱 잘 어울리는 세션이었다. Dot Mill의 정해운 대표는 미디어 컨버전스 크리에이터라는 웅장한 직함만큼 대형 이벤트에 특수 효과 기법을 총동원한 융합형 무대설치 및 운용기법과 신선한 공연을 보여줬다. 이규창 피카캐스트 이사는 모바일시대에 모바일리언들을 위한 콘텐츠의 성격을 정

의하고, 실제로 피카캐스트에서 서비스되는 실례를 보여줬다. Floor의 질문을 받지 않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pikicast의 ‘piki’가 유흥업소 호객행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했으나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김진택 포스텍 교수는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님답게 Interactive한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안전인식 기술과 개그 프로그램을 접목해 웃는 횟수로 개그 코너를 평가하는 관객 소통형 콘텐츠 시스템을 방송쟁이들에게 제안하기도 해 흥미를 더했다.

Destructive Thinking 세션에서는 첫 연사로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가 파괴를 통한 창조과정을 설명했다. 기존의 미디어를 해체해 Lego 조각을 재조립 하듯 필요한 것만 융합하고 그 결과를 유통하는 과정을 기회적인 측면에서 설명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로 MCN을 예로 들었다. 권정혁 레진코믹스 CTO는 레진코믹스가 무료 Webtoon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유료화로 성공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줬다. 강연 중에 얘기한 ‘무료 콘텐츠는 좋게, 유료 콘텐츠는 더 좋게’라는 멘트는 이해는 가지만 좀 알미운 감이 있었다.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나영석 CJ E&M PD가 맡아 줬다. 기술의 발전이 예능의 포맷을 변화시킨 이야기와 ‘신서유기’와 같이 방송에서도 시범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포맷을 채택한 사례 등을 들어서 미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블로그를 대신 하려고 거의 모든 강연에 대해 조금씩 쓰다 보니 ‘검둥개 먹감’된 것 같다. 그러나 참석해서 얻은 구체적인 미디어 트렌드 지식이나 정보 그 자체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필자를 포함한 방송기술인들이 미래에 대해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다.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한 방송기술인연합회 분들께 감사드린다. 더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방송기술과 접목이 된 강연이 많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사회자의 표현이 무색하게 필자는 올해도 행운상과는 거리가 멀어서 내년도 KOC 2016의 참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도 은근히 고기(?) 좋아합니다.

사설

KBS 사장 선임의 문제점

KBS 이사회가 10월 26일 KBS 신입 사장 후보로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을 선임했다. KBS 7대 협회에서는 “(고 후보자는) 사장 자격이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고, 양대 노조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도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KBS 내외부의 이 같은 반발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신입 사장 최종 면접 대상자 5명을 선정한 날로 되돌아 가보자. KBS 이사회는 10월 21일 특별다수제 채택을 요구한 야당 추천 이사들을 배제하고 여당 추천 이사만 참여한 가운데 최종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무엇보다 최종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야당 추천 이사가 모두 배제됐다는 것, 이 자체가 큰 문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최종 면접 대상자 5명 가운데 4명은 KBS 양대 노조와 다수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인정하기엔 많이 부족한 부적격 인사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날 서류심사에서는 후보 1인당 4분 정도의 시간 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 게다가 객관적인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 위에 2명씩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여당 추천 이사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실 심사’, ‘날치기 심사’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인, 야당 추천 이사 4인이라는 여당 주도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어 다수결의 논리로 하면 어쩔 수 없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국회선진화법도 다수결이

라는 민주주의를 깰판 놓는 악법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으니 진영의 논리로 본다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특별다수제도 반대편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KBS 이사회가 말뿐인 합의제 기구라 할지라도 야당 추천 이사 모두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합의제 기구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데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정치적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양한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을 드러내고 하기에는 국민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허나 지금 KBS 사장 선임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청와대를 등에 업은 여당 추천 이사들은 하나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야당이나 시민사회 단체, 내부 구성원 등 국민의 의견은 하나같이 다 무시하고 있다.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사회 통합과 국민 소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치적 힘의 대결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역량이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손실된다면 그 피해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무시한 권력자들의 최후를 생각한다면 고 후보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이후삼	편집주간 이성의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편집위원 백낙운, 이승호, 김명권, 최권용, 나경록		전화 02-3219-5637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팩스 02-2647-6813
기획실 강동균		트위터 @KOBETA_COM
인쇄인 성전&화성프린원		홈페이지 www.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터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DS 두성관광 테크니컬 투어 NO.1

고객님을 VIP로 모시겠습니다
www.expo114.co.kr / www.magictour.co.kr

해외 방송박람회 초대

그 동안 해외 방송 박람회 행사건으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해외전시회 전속 여행사인 두성관광에서는 하반기 해외에서 개최하는
유망 방송 전시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가바랍니다.

* 행사에 대한 세부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동경 방송전 Inter BEE 2015

기간 : 2015년 11월 18일 - 20일 (3일간)
내용 : 세계 3대 방송기기 전문 박람회
규모 : 1,000 여사 참가 (해외600업체), 38,000명 참관
▶ 대한항공 / 아시아나 / 특가항공 이용
▶ 도쿄 중심부 위치한 특급 호텔 이용
▶ NHK 기술연구소 등 견학
▶ 6가지 안으로 모집중 (문의요망)

라스베가스 가전



기간 : 2016년 1월 6일 - 9일 (4일간)
내용 :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전시회
규모 : 3,200 업체 참가, 150,000명 참관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등 좌석 다수 보유
▶ MGM, LUXOR, FLA MINGO, CIRCUS 호텔 등 보유
▶ 40가지 안으로 모객중 (문의요망)



해외 출장 떠나세요 ?

최고의전문가가 최저가로 모십니다!

홍콩 ₩ 440,000~ 대만 ₩ 480,000~

동경 ₩ 440,000~ 상해/북경 ₩ 390,000~

항공+호텔 2박 (2인실) 포함

* 기타지역 문의 환영!

방송사가 선택한 대한민국 No.1 여행사

두성관광 양용수 ☎ 02-730-6100

www.expo114.co.kr www.magoctour.co.kr

두성관광의 특별한 혜택

기업체 출장 27년 경력으로 ~

- ▶ 기업연수, 골프투어, 신혼여행 서비스 제공
- ▶ 전여행사 패키지여행 최대 7%할인
- ▶ 최저 항공료와 최적의 호텔 안내
- ▶ 정성어린 서비스와 효과적인 비용절감 제안
- ▶ 차별화된 프리미엄 여행 서비스 보장
- ▶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데이터로 예약 서비스

Best Partner

